

발표 시점 : 2015년 3월 25일(수)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5년 3월 27일(금) 조건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1:00
이후부터 취급 가능합니다.)

제목 :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 연락처 >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02-2072-6306, leebuh@hri.co.kr)

현안과 과제

■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 약화되고 있는 수출의 경제 기여도

최근 국내에서는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의 전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80~'00년대 1.0%p에서 '10~'14년 0.6%p로 축소되었다. 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구성비는 '90년 대비 '12년 11.2%p나 상승했지만,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동기간 0.696에서 0.514로, 취업유발계수도 10억원당 65.4명에서 7.7명으로 하락하는 등 산업연관효과도 약해졌다.

■ 수출 지향형 성장 지속 가능성 점검

향후 우리 경제가 수출 지향형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기업, 가계,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력이 약화되었다. 국내 순상품교역조건은 '11년부터 100을 하회, '14년에는 89.9 수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성은 '04년(26.2%), 부가가치율은 '02년(25.0%) 수준에 못 미치는, 19.5%, 21.3%('13년)에 그쳤다. **다음으로, 제조업 수익력이 크게 약화되고 노동소득 분배율도 정체되었다.**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3년 5.3%까지 하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도 '00년대 중반 수준에 못 미치는 62.4%에 머물고 있다. **또, 기업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고용과 소득 등 가계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고용률이 60.2%까지 상승하면서 실업률은 3%대 중반,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도 30%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14년 약 1,216만명에 이르는 상용직 임금 근로자의 50%를 넘는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가계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평균 소비성향이 지속 하락하는 등 가계 소비여력이 축소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역조건 변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실이 국부유출은 물론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이익은 2008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2008~2013년까지 손실액은 평균 약 18조원으로 동기간 실질 GDP 평균 약 1,278조원의 1.4%에 이른다.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반영하더라도 실질 GDP의 1%에 달해 GNI가 그만큼 축소된 것이다.

■ 시사점

한국 경제가 수출 지향형 성장에서 전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과도한 수출 지향형 성장 전략에서 내·외수 균형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 가계 여건 개선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내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감축을 통한 투자와 고용 촉진으로 내수 규모의 확대를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출 부문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통해 기업 수익성과 노동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 부품소재나 가공·조립·수출에 의존하는 수출부문의 경쟁패턴 변화 유도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 가속 등이 필요하다.**

1. 약화되고 있는 수출의 경제 기여도

- 최근 한국 경제는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하락하는 가운데 수출의 산업연관효과도 약화되면서 수출 지향형 성장 패턴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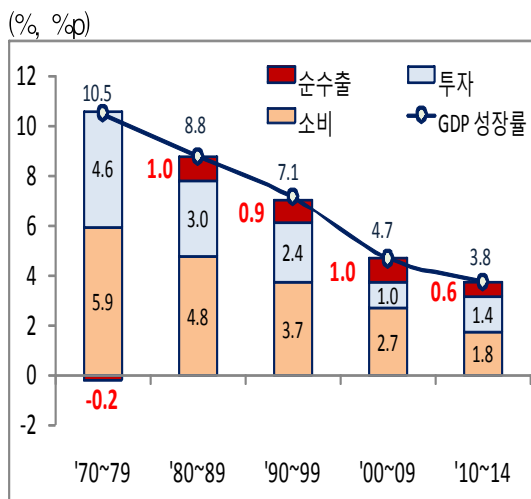
- 순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1980~2000년대까지 1.0%p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0~2014년 0.6%p로 대폭 축소

-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약화

-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구성비는 1990년 20.8%에서 2012년 32.0%로 확대되었으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동기간 0.696에서 0.514로 하락
- 더욱이,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도 동기간 10억 원 당 65.4명에서 7.7명으로 크게 약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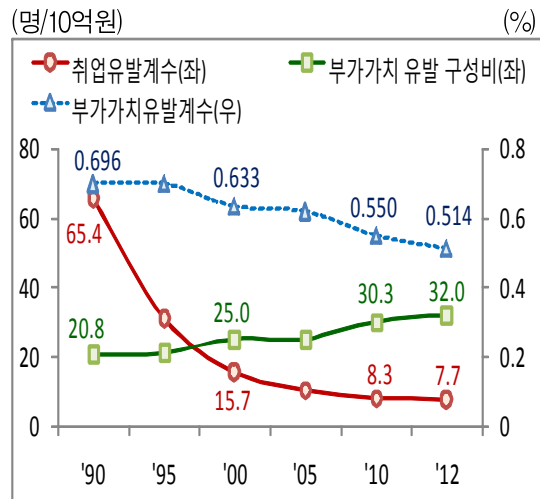
- 이하, 국내 교역조건에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문제점을 기업, 가계, 국민소득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경제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연도.
주 : 실측치 기준.

2. 수출 지향형 성장 가능성 점검

① 교역조건 악화 지속에 따르는 수출 지향형 성장의 한계

○ 교역조건이 악화가 지속될 경우 기업 경영 환경은 물론 가계 여건마저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교역이득의 유출이 가속되면서 국민소득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발생, 궁극적으로는 내수 위축과 성장잠재력 둔화라는 수출 지향형 성장 패턴의 한계에 봉착하게 됨

- 교역조건 악화 지속에 따르는 기업 환경 및 가계 여건의 악화

-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 부가가치와 수익률 창출력이 크게 악화
- 이로 인해 가계는 고용 환경이 악화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가계 전반의 빈곤화가 진행될 우려가 상존
- 특히,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가계의 미래 불안감이 증대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저축이 증가

-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국민소득 축소

-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교역이득(국부)의 유출로 국민소득이 축소. 국민들의 체감경기 및 내수 부진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한 내수 위축(소비와 투자)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수출 지향형 성장의 한계를 가져 올 가능성이 상존

< 교역조건 악화 지속에 의한 수출지향형 성장의 한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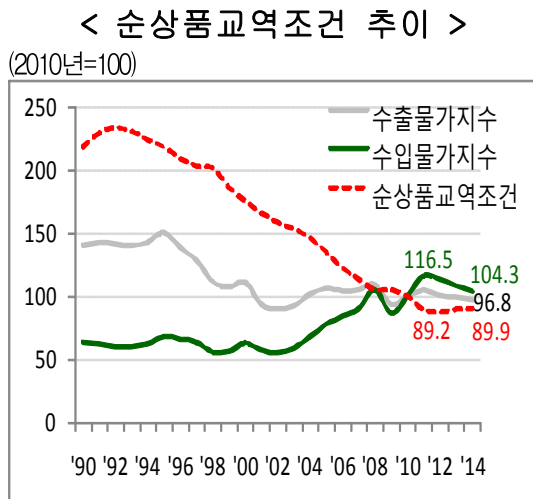


② 국내 경제의 수출 지향형 성장 지속 가능성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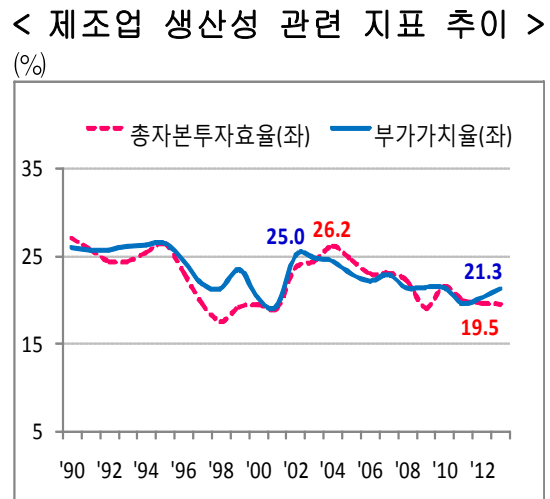
○ 교역조건 악화 속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력 개선 미흡1)

-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제조업 투자 효율성이 악화되면서 부가가치 창출력 개선이 미흡

- 국내 수출물가지수(2010년=100, 이하 동일)는 2011년부터 수입물가지수(2010년=10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 이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도 2011년부터 100을 하회, 2014년에는 89.9 수준에 그침
- 이런 가운데 제조업 총자본투자효율성은 2004년(26.2%), 부가가치율은 2002년(25.0%)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2013년 각각 19.5%, 21.3%에 그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연도.

○ 제조업 수익력 악화 속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세 미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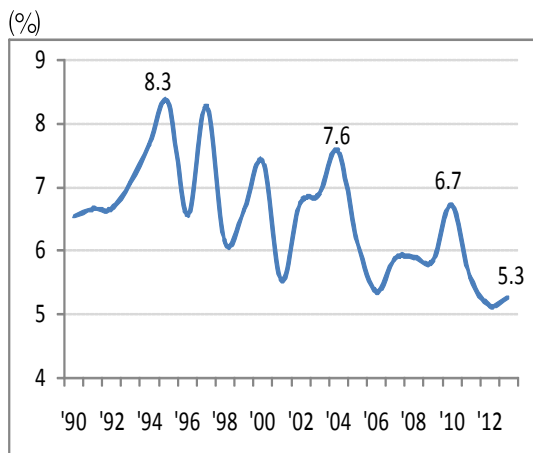
- 국내 제조업의 수익력 악화와 동시에 인건비와 같은 비용 절감 노력이 강화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세도 미약

1)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4차례(1990~1997년, 1998~2007년, 2007~2010년, 2009년~)에 걸쳐 발표된 자료들을 최신 시계열을 중심으로 연결한 것으로 항목별 통계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추세적인 경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함.

2) 각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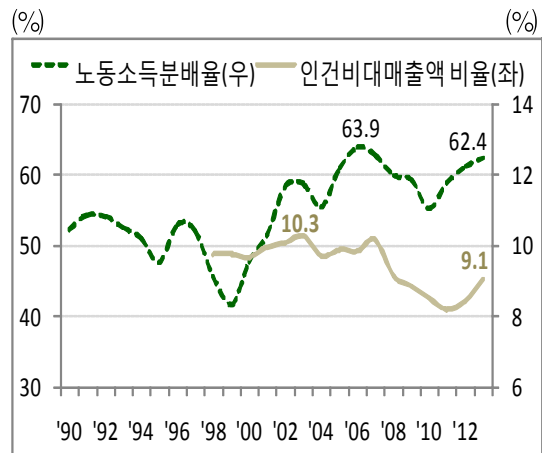
-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는 5.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이처럼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2000년대 초반 10%대 초반에서 최근 9% 내외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비용 절감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제조업 노동소득 분배율도 2013년 62.4%로 200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무는 등 개선이 지연되고 있음

<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연도.

< 제조업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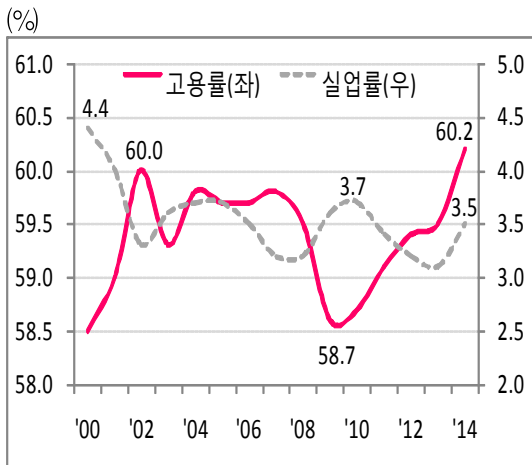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연도.

○ 고용, 소득 등 가계 여건의 악화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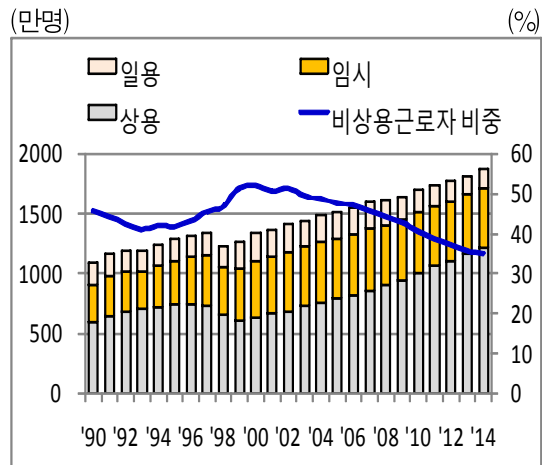
- 고용률 제고로 실업률은 낮지만, 대규모 비정규직 일자리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이 상존
 - 2008년 58.7%까지 하락했던 고용률이 2014년 60.2%까지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실업률도 3% 중반 수준에서 추이
 - 이에 따라, 1998년 IMF 사태 이후 50% 이상 수준으로 치솟던 임시 및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도 최근에는 30%대 중반까지 하락
 - 하지만, 2014년 기준 약 1,216만명에 이르는 상용직 근로자의 50%를 넘는 약 660만명(2014년)의 비정규직 근로자 존재하는 등 고용시장의 구조개선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음

< 국내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 국내 취업구조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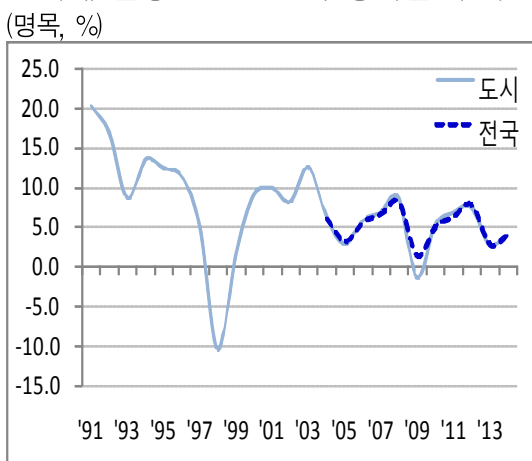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가계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평균소비성향도 지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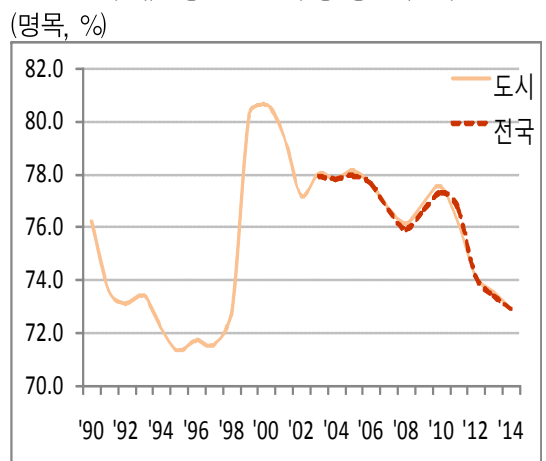
- 도시 2인 이상 전체 가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 8.7%, 2000년대 6.6%, 2010~2014년 5.1%로 둔화세가 지속
- 이처럼 가계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계 평균소비성향(도시 2인 이상 전체 가구)도 각각 73.6%, 77.9%, 74.8%로 최근 들어 하락세로 전환되었음

< 가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추이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2인 이상 가구 대상 집계.

< 가계 평균소비성향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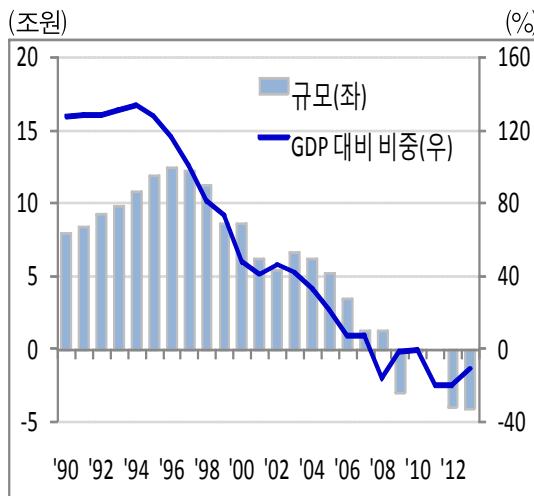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2인 이상 가구 대상 집계.

○ 교역손실 확대에 따르는 국민소득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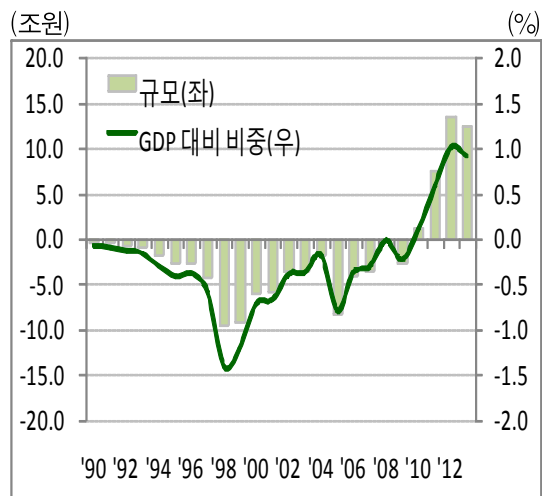
- 최근 들어 실질무역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증가세가 실질무역손실 발생 규모에 못 미치는 현상이 지속
 - 1990년대 중반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던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이익은 2009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 2013년에는 18.8조원(실질 GDP 대비 1.4%)의 무역손실을 기록
 - 한편,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010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2013년에는 실질 GDP의 0.9% 수준인 12.5조원에 달했으나, 여전히 실질무역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

< 교역조건변화 반영 실질무역이익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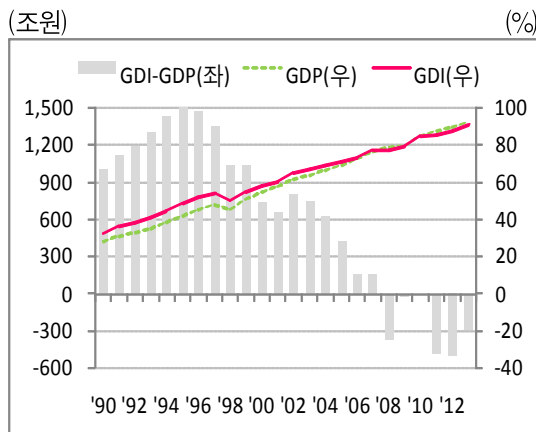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실질 GNI에서 실질 GDI를 뺀 값임.

- 이로 인해 실질 GDP에 비해 실질 GDI와 GNI의 규모가 축소, 이는 실물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
 - 실질 GDI가 실질 GDP를 하회하기 시작한 2008부터 2013년까지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의 손실액은 평균 18.3조원이며, 실질 GDP 대비 비중은 1.4% 수준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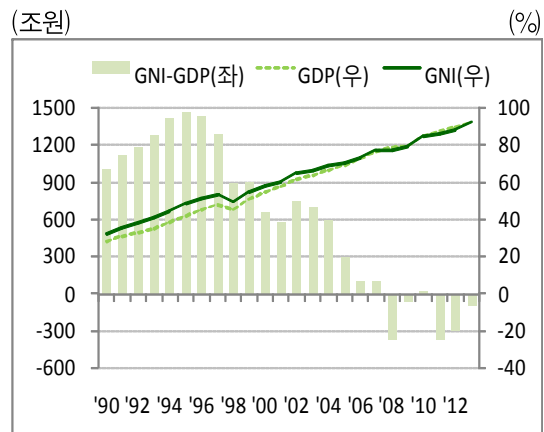
- 한편, 2010년부터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교역조건변화를 반영한 실질무역의 손실이 GNI를 축소시키는 영향을 감소시켰으나, 이들 두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2008~2013년 실질 GDP 대비 약 1% 수준인 약 12.9조원의 GNI 손실이 발생

< GDP와 GD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GDP와 GNI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이익이 GNI에 미친 영향 >

(평균, 조원)

구 분	1990년대	2000-2007년	2008-2013년
실질 GNI(A)	672	1,008	1,265
GDP(B)	592	977	1,278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이익(C)	82.8	35.9	-18.3
실질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D)	-3.1	-4.5	5.4
A-B	80	31	-13
C/B*100(%)	14.0	3.7	-1.4
((C+D)/B)*100 (%)	13.5	3.2	-1.0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참고 > GNI와 GDI 관계식

- GDI(국내총소득) = GDP + 교역조건 변동에 따르는 실질무역손익
- GNI(국민총소득)
= GDP + 교역조건 변동에 따르는 실질무역손익 + 대외 순수취 요소소득
= GDI +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

3. 시사점

- 최근 한국 경제는 교역조건 악화로 기업경영환경은 물론 가계여건마저 악화되는 가운데 교역이득의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소득이 축소되는 등 수출 지향형 성장 패턴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선, 과도한 수출 지향형 성장 패턴에서 내·외수 균형 성장 패턴으로의 전환 노력이 시급
 - 전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의료, 바이오, 나노, 환경 등의 분야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에 힘써야 함
 - 가계 부채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자영업 경쟁력 제고, 벤처 육성 지원 강화 등을 통한 내수 기반 건전성을 확보
- 다음으로, 덩어리 규제의 체계적이고 과감한 감축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내수 규모의 확대를 꾀해야 함
 - 다수 부처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덩어리규제' 등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감축 로드맵'을 작성, 체계적이고 과감한 감축 내지는 관리가 필요
 - 규제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비용편익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
 - 정부와 기업 간 '규제유연화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정 규제와 산업현장과의 괴리 발생 시 해당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 수출 부문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력 제고를 통해 기업 수익성을 제고시키고 노동소득 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기업 R&D, 혁신 인재 육성 및 활용, 기업 생태계 확립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노동소득 분배 기능 강화는 노사 협의를 넘어서 범사회적인 합의가 필요
- 마지막으로, 수입 부품·소재나 모듈의 가공·조립·수출에 의존하는 수출 부문의 경쟁 패턴 변화 유도, 에너지 정책의 전환 가속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
 - 특히, 에너지 부문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변동이 심해 교역조건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보급 촉진 등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

이 부 형 수석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